

끝 안보이는 '3高' 터널... 韓, PF 부실 우려 등 긴장감 고조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중동지역 전쟁 위기... 앞친데 덮쳐 유가 상승시 금리·물가 등 영향 "부동산 PF 정상화 쉽지 않을 것"

이란-이스라엘 중동전쟁 우려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서민물가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 확산 등 한국경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서민들 공포 확산

중동전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은 유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여파로 물가상승으로 연결,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올 초 70달러 초반에서 머물던 서부 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86달러까지 치솟았고, 브렌트유와 두바이 유 선물은 90달러를 돌파했다. 전쟁이 확산될 경우 국제유가는 2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 특히 국제 원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 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 원유의존도가 72%에 달해 수급 차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7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를 향해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뉴시스

유가가 치솟을 경우 수입물가 역시 상승하면서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7.85(2015=100)로 전월(137.24) 대비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해 하락했지만,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1.0%), 석탄 및 석유제품(1.0%), 제1차 금속제품(0.7%) 등이 올랐다. 소비자물가도 수입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받아 상승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 2.8%로 지난해 하반기 평균(3.3%)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2월과 3월에 농산물·유가가 오르며 3.1%로 꺾였었다. 수입물가 상승은 보통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4월 이후에도 수입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도 서민들의 공포를 키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5년, AAA)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3.893%로 이달 초(3.737%)와 비교해 0.156%포인트(p) 상승했다.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시장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에 차주 신용도별로 매겨지는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준거금리에 해당하는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전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게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채권금리 상승 추세는 지속돼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해, 주담대 금리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더 이상 주담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현재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고물가가 지속되면 다시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부동산 경기 '적신호'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2022년 말(130조 3000억원) 대비 5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2.70%로 1년 새 1.51%포인트(p)나 늘어났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9조 6000억원으로 1년 새 9000억원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6.94%로 2022년(2.05%) 대비 3배 이상 상승하면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은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을 뜻한다. 건설사가 금융권 대출로 토

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린 뒤 분양 수익을 내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기연장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업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류비 상승 등은 자연스럽게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자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져 미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부동산PF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다. 실제 지난 2월 전체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잠정)을 기록하면서 지난 2020년 1월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적극적 리스크 관리와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주택 매매 수요침체로 수요 회복 전까지는 주택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PF 경색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복현 금감원장, 행동주의펀드 대표 간담회

"단기 수익만 쫓지말고 장기 성장전략 제시해야"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마련 당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행동주의 기관들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단기수익만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 대신 '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과 주주 투자가 상생·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행동주의펀드 대표들을 만나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도 비롯해 정기주총 자리에서 펀드와 대립했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장사 유관단체와 자본시장 전문가도 의견을 더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대표해서는 황성택 트러스트자산운용대표이사, 강성부 KCGI 대표이사, 박형순 안다자산운용대표이사,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이사, 차종현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주주행동주의 펀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고 있다"는 말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원장은 이날 행동주의펀드 측에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는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발전에도



18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 올라온 주주제안 93건 중 가결된 안건은 총 28건으로 열 건 중 일곱 건은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올해 가결된 안건 중 주주환원 관련 안건은 두 건 뿐이고 이사 선임 안건 등 26건의 가결율은 30%였다. 늘어난 접수 안건에 비해 저조한 셈이다. 이어 "올 주총 결과에서 보듯이 행동전략이 탄탄하지 못하면 주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다"며 "책임감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주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기업에는 주주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 소통해달라"며 "이제는 주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직접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시대"라고 언급했다. 또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행동주의펀드 운용사들은 기업들의 비협조로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현실 전하며, 행동주의 기관 스스로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회사의 장기성장 목표 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인정했다.

기업들은 주주행동주의로 인해 기업 평판이 떨어지거나 경영 안정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주 행동주의가 주주권의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만 기업을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 유관기관들은 주주행동주의와 기업 대응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주환원 등 행동주의 활동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반으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해 주주의 이익을 키우고,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韓, 최대 수출국 달라졌다... 美 > 中 '역전'

(310억弗) <309억弗>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수출 증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대(對) 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2003년 2분기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수출액(309억 달러)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무역역주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어 기술혁신과 인재확보 등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미국 내수경기 회복세... 소비·투자 늘어

미국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팬데믹 이후 미국의 내수경기가 회복되며 소비·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수경기와 대(對)미국 수출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팬데믹 이후(2020~2023년) 상관계수는 0.91로 전 기간(2000~2023년) 상관계수(0.56)의 2배수준이다. 내수경기 회복과 함께 수입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안과 함께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과시키는 등 산업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친환경 제품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

다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도 컸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2015~2019년 평균 20.7%에서 2000~2023년 16.7%로 4%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3.1%→3.5%, 베트남은 2%→3.7%로 늘었다.

남석모 국제무역팀 과장은 "제조업 FDI 확대는 선진국들과의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그동안의 중국 중심 수출구조를 다변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제재 우려... 수출 경쟁력 관건

한국은행은 중장기적(2~10년)인 관점에서 미국 수출이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무역역주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 앞서 2017~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FTA 재협상을 추진하거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에너지·농축산물 등으로 수출품목을 확대할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분야에서의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